

중국 금융위기 대응 정책의 효과와 전망

2010년 제3회 한·중 경제포럼

1. 주 제 :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한 중국의 정책, 효과와 문제점
2. 일 시 : 2010. 4. 22 (목) 16:00~18:00
3. 발표자 : 중국인민대학 경제학원 부원장 류루이(刘瑞)

1. 중국의 금융위기 대응 정책

- 2009년 상반기는 중국경제가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을 가장 심각하게 받았던 시기였지만, “신속한 대응, 정확한 조치, 실질적 업무 추진”이라는 거시조정 원칙과 “성장유지, 구조조정, 취업촉진”이라는 거시조정 목표에 따라 일련의 정책을 실시하여 “8% 경제 성장률 유지”라는 안정적인 성장 및 거시조정 목표를 실현하였음.
- 2009년 중국경제가 세계에서 주목하는 성과를 거둔 것은 중국정부의 대응 정책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

가. 4조 위안의 경기부양책

□ 2009년과 2010년에 걸쳐 총 4조 위안의 투자를 계획

- 4조 위안의 투자 중 중앙정부의 투자가 1조 1800억 위안(29.5%)이며, 지방정부 재정예산·중앙 정부에서 대리 발행한 지방정부 채권·정책적 대출기업(회사)채권과 중기 어음·은행대출과 민간 투자 등이 2조 8200억 위안(70.5%)임.
- 투자의 재원은 주로 정부 재정지출임: 2009년 재정적자는 9,500억 위안이었으며, 2010년 재정적자는 1조 500억 위안으로 계획하고 있음.
- 4조 위안 투자의 투입 구성은 아래와 같음.

<표1> 4조 위안 투자의 투입 구성

중점 투입 항목	자금 예산 (억 위안)	비중 (%)
저가임대 주택, 판자촌 개조 등 보장성 주택	4,000	10.00
농촌 물·전로·가스 주택 등 민생 공사와 인프라시설	3,700	9.25
철도·도로·공항·수리 등 중대 인프라시설 건설과 도시 전력망개조	15,000	37.50
의료위생, 교육문화 등 사회사업 발전	1,500	3.75
에너지절약·배출감축과 생태 건설공사	2,100	5.25
자주혁신과 산업구조조정	3,700	9.25
원촨(汶川)지진재해 복구 건설	10,000	25.00
합계	40,000	100.00

나. 개인소득과 사회보장 지출 확대

□ 4조 위안의 투자는 내수확대 이외 아래 항목에도 활용되고 있음.

- 농민 보조금 증가, 도시와 농촌의 저소득층 지원수준 확대, 기업 퇴직자의 기본양로금 확대, 우대 무효대상 등에 대한 위로금과 생활보조금 기준 및 생계곤란 계층에 대한 일회적인 생활

보조금 향상, 가전하향 보조금과 자동차 하향 보조금 등임.

다. 기존 세율에 대한 구조적 조정

□ 수출환급세율의 상향 조정

- 방직기업의 경영난 완화, 수출 안정과 취업확보를 위해 2008년 8월 1일부터 일부 방직품의류의 수출 환급세율을 11%에서 13%로, 일부 침대제품의 수출 환급세율을 11%로 인상 조정
- 2008년 11월 1일부터 중국 세관 세칙의 총 상품수량에서 25.8%에 해당하는 3,468개 상품의 수출 환급세율을 인상 조정할 것을 발표

□ 기업과 주민의 조세부담 감소를 위해 구조적 감세정책을 실시

- 2008년 약 2,800억 위안에 달하는 기업과 주민의 조세부담이 감소되었음.
- 2009년 소비형 부가가치세와 제품유 소비개혁 실시, 100가지 행정 사업형 비용 취소 등 새로운 세율 감면 조치 등으로 기업과 주민의 조세부담이 5,500억 위안 감소됨.

라. 산업구조 조정

□ 10대 산업 진흥규획 제정과 더불어 6대 전략적 신흥 산업의 발전목표를 제시하였음.

- 10대 산업: 자동차, 철강, 방직, 장비제조, 선박, 전자정보, 경공업, 석유화학, 비철금속, 물류
- 6대 전략적 신흥 산업: 신에너지, 신소재, 바이오의약, 첨단제조업, 문화 창조 산업, 정보산업

마. 가전하향(家電下鄉) 등 소비 부양책

□ 가전하향

- 정책 실시범위가 일부 지역에서 전국으로 확대되었고, 지원제품 수도 10개로 확대되었으며, 가계별 구입 가능한 가전하향 제품수량도 1대에서 2대로 확대함.

□ 자동차 하향과 오토바이 하향

- 2009년 3월 1일부터 자동차 하향정책을 실시하여 농민은 3륜 자동차, 폐기 신고한 1.8톤 이상 저속 화물차, 6.0톤 이하의 경형 적재화물차를 교체 구매하거나 1.3L 이하의 소형차를 구입할 때 제품 판매가격의 10%에 해당되는 재정보조금을 제공. 단가가 5만 위안 이상일 경우 5,000위안의 정액 보조금을 지급함.
- 2009년 2월 1일부터 오토바이 하향 정책을 실시하여 판매가격의 13%에 해당되는 보조금을 지급하였으며, 단가가 5,000위안 이상일 경우 1대당 650위안의 정액 보조금을 지급함.

□ 농기구 보조금

- 2009년 중앙재정에서 농기구 구입보조금 규모를 대폭 확대하여 전국 모든 현(顯)으로 확대하였으며, 보조금 지급 품종을 12가지 대분류, 38가지 소분류로 확대하였음.

□ 자동차 및 가전제품의 “이구환신(以旧换新)”

- 2009년 중앙재정에서 노후한 자동차 폐기·교환에 대한 보조금 규모를 10억 위안에서 50억 위안으로 확대하였고, 20억 위안의 자금을 가전제품의 교체구입 보조금으로 활용하였음. 이는 소비수요 확대에 유리할 뿐만 아니라 에너지자원의 이용효과를 향상시킬 수 있고 순환경제의 발전 촉진에 도움이 됨.

□ 에너지 제품의 혜민(惠民)공정

- 2009년 5월부터 효능등급이 1급 혹은 2급 이상인 에어컨, 냉장고, LED TV, 세탁기, 전기기계 등 10대 고효율 에너지 절약 제품을 구입하는 소비자에 대해 1대당 300위안~850위안의 재정보조금을 지급하고 고효율 제품의 보급을 가속화하였음.

바. 신용대출 확대

- 중국 정부가 ‘적극적인 재정정책’ 과 ‘적당히 완화한 통화정책’ 을 실시함에 따라 신용대출 투입이 확대되었음.
- 2008년 신규 대출규모는 4조 9천억 위안, 2009년 각종 신규 대출은 9조 6천억 위안에 달하였으며, 2010년의 신규 대출 규모를 7조 5천억 위안으로 설정하였음.

2. 금융위기 대응정책으로 인한 문제점

가. 투자가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전통적인 모델이 지속

- 규모나 발전 속도 면에서 경제성장에 대한 투자의 기여정도가 소비를 초과하였고 이러한 패턴은 일정 시간 지속될 것으로 보임.

나. 부동산 시장 과열과 리스크

- 위기대응 기간, 의외로 부동산시장이 활성화되어 부동산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였음.
- 이에 따라 1990년대 초 일본 부동산시장의 버블 및 붕괴와 비슷하다고 우려하는 의견도 있지만 부동산시장의 과열은 중국의 특수한 상황과 관련된 것으로 일본과는 완전히 다른 것임.
- 부동산시장 과열로 인해 가장 큰 혜택을 얻은 지방정부는 부동산시장 조정에 대하여 소극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음.

<표2> 중국의 부동산시장 현황

	부동산개발 투자총액 누계액 (억 위안)	부동산개발 투자총액 증가율 (누계기준, %)	부동산 판매 가격지수 (당월, %)
2009. 2	2,398.15	1	95.76
3	4,880.29	4.1	97.43
4	7,289.98	4.9	98.30
5	10,067.22	5.8	100.01
6	14,295.41	8.3	101.96
7	17,392.3	9.5	112.35
8	20,740.94	12.5	113.76
9	24,560.00	15.4	114.38
10	27,886.58	16.6	114.88
11	31,270.92	17.8	115.12
12	36,231.71	16.1	115.20

다. 인플레이션 기대심리

□ 대규모 경기부양책으로 인해 유동성 과잉문제가 대두되고 인플레이션 우려도 제기되고 있음.

- 그러나 아직까지는 기대인플레이션 문제이지 실질적인 인플레이션은 발생하지 않았음. 2010년 하반기에 3% 이상의 온화한 인플레이션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

<표3> 중국의 CPI와 PPI 변화

월별	2009.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주민소비 가격지수 (CPI) %	101.0	98.4	98.8	98.5	98.6	98.3	98.2	98.8
공업품 출하 가격지수 (PPI) %	96.7	95.5	94	93.4	92.8	92.2	91.8	92.1
월별	9월	10월	11월	12월	2010.1월	2010.2월	2010.3월	
주민소비 가격지수(CPI) %	99.2	99.5	100.6	101.9	101.5	102.7	102.4	
공업품 출하 가격지수 (PPI) %	93	94.2	97.9	101.7	104.3	105.3		

라. 대외무역의 어려움

- 2010년에 들어서 수출입이 다소 호전세를 보이다가 2010년 3월 70개 월 사이 처음으로 무역 적자를 기록하였고 적자금액은 74억 달러에 달하는 등 대외무역은 여전히 낙관적이지 못함.
- 이는 중국의 수출지향형 시장경제가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을 받아 수출지향형 발전모델에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였음을 시사함.
- 즉 수출지향형 경제성장에서 내수 견인형 성장으로 발전하기 시작하였고, 경제의 내·외수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하였으며, 위안화 평가절상 압력이 완화되기 시작하였다는 의미임.

3. 미래 정책 동향

-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정책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지만, 안정적인 통화정책은 가격지수의 파동에 따라 변화할 것으로 예상되어 가격지수 동향에 따라 긴축 혹은 완화된 통화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
- 국제시장 압력의 영향을 받아 무역 적자는 지속될 것이지만 확대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
- 위안화는 소폭 절상될 것이며, 환율은 기본적으로 안정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
- 토지 조정정책과 부동산 조정정책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
- 정책의 제정과 실시에 대한 환경요인이 날로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전망
- 소득분배 조정 정책으로 소비를 자극할 전망
-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정책 개선에 따라 민간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

□ 2010년의 경제성장은 상승 추세를 지속할 것이며, 경제과열 가능성에 대한 경계가 필요함.

〈질의응답〉

질문 1.

2010년 1/4분기 경제성장률이 11.9%에 달하는 등 과열 우려로 기준을 인상 등의 정책을 취하고 있음. 그리고 이들 정책의 효과는 3~6개월 이후 나타날 것으로 전망됨. 2011년 경제과열 현상을 걱정하고 있는데 정책시행 효과가 2010년 안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는가? 위안화 절상에 있어, 브라질과 인도도 같은 개도국들도 중국의 위안화 절상을 요구하고 있음. 이러한 국제적 요구에 중국의 위안화 절상이 앞당겨 이루어지고 폭이 좀 더 확대될 가능성은 없는가?

답변 1.

장기적으로 볼 때, 경기과열은 일종의 주기적인 파동이라고 할 수 있음. 2008년에 하락세를 보인 후 2010년 반전되어 상승세가 나타났는데 이러한 상승세는 향후 2년~3년 정도 지속될 것으로 생각함. 이는 개혁개방 이후 30년 간 중국경제의 뚜렷한 특징임.

2009년 1/4분기 경제성장률이 6.1%였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2010년 1/4분기 경제성장률은 회복성 성장이지 경기과열이 아님. 중국경제의 경기과열 여부는 2010년 2/4분기와 3/4분기 상황을 살펴야 할 것임. 설사 향후 경기가 과열될지라도 정부에서 적당한 조치를 취할 경우 통제 가능하다고 판단됨.

위안화 환율문제는 중국의 주권문제임. 브라질과 인도는 중국과의 무역액이 비교적 적은데, 이 두 개 국가가 어떤 목적에서 절상요구를 하였는지 본인도 궁금함. 미국의 위안화 절상 요구는 국내 실업률을 해결하기 위한 것임. 미국정부는 중국이 미국 제조업을 대체하여 실업률을 증가시키고, 중국의 수출로 인해 고용창출이 감소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일부 미국 학자들은 미국의 제조업은 경쟁력 부족으로 퇴출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음. 하지만 미국정부는 여전히 제조업 회복을 통해 고용을 창출하려고 하고 있음. 이는 위안화 절상을 통해 해결되는 문제가 아님. 위안화 절상여부는 전문가들이 토론해야 할 경제문제이지 정치문제는 아님. 개인적으로는 미국이 중국

위안화 환율에 대해 지속적인 압력을 줄 경우 중국정부도 일정한 양보를 하게 될 것이고 위안화 절상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함. 2010년 말까지 2~5% 정도로 절상할 것으로 예상함.

질문 2.

2010년 중국 경제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가 부동산가격의 안정이고 최근에 부동산 가격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음. 최근 북경 교외의 일부 부동산가격이 40% 하락하였고 절강상인들의 투기행위가 많이 사라졌다는 언론보도가 있는데 과연 부동산 가격이 정책의 영향으로 안정적인 가격을 유지할 것이라고 보는가? 정책의 효과에 대해 어느 정도까지 확신할 수 있는가? 정책효과가 기대 이상이어서 향후 부동산 가격이 대폭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가?

답변 2.

부동산과열 현상은 중국의 도시화 진척에서 비롯된 것이고 2009년에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였음. 즉 1995년 이후 도시화발전을 추진하면서 부동산이 과열되기 시작하였고, 특히 2000년 이후 부동산 가격은 상승세를 지속하여 장기적인 추세로 자리 잡았음.

중국정부가 부동산 관련 정책을 발표한 주요 목적은 투기자들의 투기행위를 단속하려는 것이지 부동산가격을 일정 정도 인하하려는 것이 아님. 북경의 주택 건설비용은 1㎡당 3천 위안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투기행위로 인해 4환(環) 이내 부동산 가격은 1㎡당 3만 위안 이상임. 정부에서 출자 건설한 저가주택의 가격은 1㎡당 5,000 위안 정도임. 즉 1㎡당 3만 위안 이상의 가격은 시장가격이 아니고 투기행위로 인한 가격인 것임. 중국인의 80%가 주택을 구입하려 하기 때문에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큼. 이러한 막대한 수요로 인해 중국 부동산가격은 하락한다고 해도 비교적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임.

질문 3.

최근 국진민퇴(國進民退)에 대한 논란이 많음. 통계국 등 부처는 국진민퇴 현상이 없다고 주장하고 최근 사회과학원에서도 이를 수치로 입증하였음. 국진민퇴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자원이 국유 기업으로 많이 집중된다고 지적하고 있음. 일부에서는 2009년 4조 위안의 투자나 10조 위안의 대출 중 대부분이 국유기업에 투입되었음을 지적하고 있음. 현재 정부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을 증가하겠다고 하는데 정부의 계획대로 진행되리라고 생각하는가?

답변 3.

개인적으로도 국진민퇴 현상이 없다고 생각함. 2009년 중국정부는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많은 행정수단을 동원하였고, 이는 많은 경제학자들의 불만을 자아냈지만 정부가 별도로 이에 대한 의견을 내놓지 않아 국진민퇴 현상이 나타났다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늘어난 것임.

국진민퇴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다음과 같음. 최근 국유기업이 전체 공업생산액에서 차지하는 비중, 자산비중, 이윤비중, 조세비중, 종업인원 비중은 모두 하락하였음. 2009년 글로벌 경제위기 영향을 받아 중소기업은 자금난을 겪게 되었지만 중소기업에 대한 은행대출 문제는 2009년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 개혁개방 이후 줄곧 지속되어온 문제임.

중국은 은행체계 개혁과 민영은행의 발전을 통해 민영기업의 자금난 문제를 해결해야 함. 대형은행, 상업은행은 대출리스크를 감안하여 자산 담보가 없는 기업에 대한 대출을 희망하지 않고 있음. 중소은행 발전을 통해 중소기업의 자금을 확보해야 하며, 중국은 이 부분에 대한 개혁을 추진해야 할 것임.

4조 위안의 투자 중 민영기업에 대한 투입이 적다는 주장에 대해 조사를 한 적이 없지만 이러한 주장을 믿기 어려움. 왜냐하면 정부가 국유기업에 프로젝트를 맡길 경우, 하청방식을 통해 민영기업에 자금이 유입되기 때문임. 즉 민영기업은 직접 정부로부터 자금을 받는 것이 아니지만 국유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국유기업으로부터 투자금을 받게 되는 것임. 4조 위안의 투자 중 많은 부분이 사회기반시설에 투입되고 그 시공의 90% 이상을 민영기업에서 담당하였음. 따라서 4조 위안의 투자액이 민영기업에 극히 적게 유입되었다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음.

질문 4.

위안화 환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환율제도 개혁이라고 하였는데, 제도 개혁은 언제 가능한가? 최근 언론에서 위안화 환율제도 개혁을 완만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하였는데 2010년 안으로 가능한가? 2010년 2~5%정도 위안화가 절상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는데 절상폭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가?

답변 4.

2005년 환율개혁 전까지 중국은 고정 환율 제도를 실시하였고 2005년부터 관리 변동환율 제도를 실시하였음. 당시 4개 국가의 통화와 연계하여 중국의 환율을 확정하기로 하였고 3년 간 지속 추진하다가 2008년에 포기하였음. 따라서 위안화 환율 개혁은 절반 추진되었다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되었음.

본인은 학자입장에서 시장가격 변화가 환율에 반영되는 변동환율 제도를 선호함. 사실 중국 내 대부분 경제학자들은 변동환율 제도를 실시해야 하고, 그 구체적 추진 시기는 국제적 압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중국의 선택에 의해 정해져야 한데 동의하고 있음. 위안화의 절상 폭이 얼마나 될 것인가에 대한 예측은 어려우며, 환율은 시장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질문 5.

한국이 미국과의 FTA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 한중 FTA를 서두른다는 견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답변 5.

한국은 국내시장이 작기 때문에 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외부시장에 의존해야 함. 즉 한국의 FTA 수요가 미국과 중국에 비해 좀 더 긴박하다고 할 수 있음. 하지만 FTA는 체결 당사국에 모두 유리해야 함. FTA 협상에서 한 국가의 수요를 만족시키지 못할 경우 그 국가는 협상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음. 이는 한중, 혹은 한미 FTA 협상에 있어 가장 큰 어려움임. 예를 들면 한국은 농민, 농산품에 대해 보호하는 반면, 한미 FTA 협상 시 농산품에 대한 논의가 가장 많았고 중국과 FTA를 추진하게 될 경우에도 농산품 분야에 대한 논쟁이 가장 많게 될 것임. 또한 일부 한국 기업들은 중국이 한국의 기술을 추월하는 것을 우려하여 일부 선진 기술 보호 차원에서 중국에 불공정한 조치를 취하고 있음. 예를 들면 중국기업이 한국의 쌍용 자동차를 매수하려고 하였는데 어려움이 많았고 결국은 실패하였음.

한중 양국이 어렵게 FTA 협상 추진할 바에는 한 개 혹은 여러 개 국가를 추가하여 다자간 FTA를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함. 지리적 위치 등을 감안할 경우 한중일 FTA 추진이 가장 바람직하고 실현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생각함.

질문 5.

중국의 경제규모는 세계 2위이지만, 중국의 환율은 자유롭게 변동하지 않음. 미국은 중국의 환율 제도의 개혁을 요구하고 있으며, 동시에 중국은 위안화 국제화를 추진하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위안화에 대한 다른 국가의 신뢰도가 유지될 수 있다고 보는가? 위안화 국제화 추진과 환율시장의 관계가 모순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답변 5.

이 문제에 대해 중국정부도 고민 하고 있음. 위안화 국제화는 일부 주변국가와의 무역에서 위안화 결제에 협의하여 중국 주변 지역에서 추진되고 있음. 하지만 중국정부는 위안화 개방 중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 자본계정에 대한 자유로운 태환에 대해서는 크게 우려하고 있음. 자본항목을 개방한 후 국제 투기자들의 투기행위로 인해 중국의 미완된 금융체계가 심각한 영향을 받게 될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임.

자본계정에 대한 자유로운 태환문제가 해결되어야만 변동환율 제도나 위안화 국제화를 추진할 수 있을 것임. 학자입장에서 볼 때 위안화 국제화는 다음과 같은 3가지 단계를 거쳐야 한다고 생각함. 첫째, 현재 일부에서 추진되는 것처럼 달러 이외 위안화 결제가 가능하도록 해야 함. 둘째, 위안화가 유통되도록 하고 무역통화로 기타 국가에서 사용되도록 해야 함. 셋째, 위안화를 달러와 같이 외환보유화폐로 이용하도록 해야 함. 이러한 3가지 단계를 거쳐야만 위안화 국제화를 완성하였다고 할 수 있음. 하지만 중국 인민은행 통화정책위원인 샤빈(夏斌)은 이렇게 되기까지 약 15년이 소요될 것이라고 예상하였음. 개인적으로 위안화의 국제화는 향후 20년 후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함.